

# 마한의 치소, 익산 건마국 아닌 나주 반남 월지국

기고

박동

바른역사 시민연대  
자문위원·정치학 박사



‘전라도천년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매국사학 태두 이병도의 주장에 근거해 전라도사가 근초고왕의 식민지로 폄훼돼 왔다. 전라도천년사가 아닌 전북도천년사로 둔갑된 천년사의 핵심은 중국 사서인 삼국지에 근거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고조선의 준왕이 익산으로 이주해 와 전북 익산-전주 일대에 마한 치소를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준왕이 한왕(韓王)을 칭했으므로 마한의 치소는 익산 건마국이라고까지 주장을 확장시켰다.

그런데 삼국지에는 준왕이 익산으로 이주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준왕은 바다로 들어가 도망쳤다고 했을 뿐 익산으로 갔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 오히려 삼국유사에는 준왕이 평양 인근의 한(韓)으로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삼국지에는 진한인들이 진시황의 고역(서기전 210년에 종료)을 피해 마한으로 망명했다고 기록했으므로 마한이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에는 마한 성립과 관련해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겼다(서기전 194년)’면서 위락의 기록을 인용해 진개의 공격(서기전 296년)으로 마한이 성립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마한의 치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삼국지는 마한 진왕은 월지국에서 통치한다고 하면서 그 아래 안야 축지, 부례구야 진지림이 신지로 복속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안야는 아라가야를

가리키고, 부례구야는 금관가야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들 가야 2국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삼국지는 서기 280년경 발행됐으므로 그 이전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본 결과 서기 209년과 212년 두 차례에 걸쳐 포상팔국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9년 아라가야를 대상으로, 212년은 금관가야가 그 대상이었다.

이 전쟁을 주도한 나라는 보라국(保羅國)으로 삼국유사 일연선사는 ‘보라는 발라로 지금의 나주다’라고 기록했다. 일본서기 신공왕후 49년조(249년)에도 가라7국 정벌전쟁에 대한 기사가 등장한다. 이는 공간적으로 가야 지역을 가리키고 시간적으로 3세기 초이므로 삼국사기가 기록한 포상팔국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내용을 통해 포상팔국전쟁을 주도한 장수와 전쟁주체 세력이 모두 나주를 가리키므로 삼국지가 기록한 마한 진왕의 치소 월지국은 나주 반남에 위치한 발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월지국 실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사전에 입각해 나주, 영암, 해남 일대의 월(月)계 지명을 찾아본 결과 전국 사·군·구 평균 6.6개의 7배에 달하는 월계 지명이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천년사’는 일본서기 기년 조작이 가장 심한 신공왕후 49년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초고왕이 전라도 남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했으며 고국원왕을 살해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즉 369년에 근초고왕이 가야 7국을 정벌하고 이어 해남으로 비정되는 남만 침미다례를 도록했다는 것. 왜와 함께 고

사산에 올라 맹세를 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천년사’는 일본서기 뒷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천추만세에 서번이라 칭하고 야마토왜에 조공을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광주-전남은 한강유역 지역의 식민지이고 십제는 왜의 서번이었으므로 광주-전남은 왜의 이중 식민지였다는 것이다. 이병도는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가라7국 정벌전쟁의 기년인 249년에 120년을 더한 후 369년에 신공왕후가 아니라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벌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69년에 근초고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삼국사기 근초고왕 24년(369년) 기록에는 고구려왕 사유가 보기 2만으로 쳐들어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리하면,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포상팔국전쟁 관련 기록을 도래계 목씨의 사서인 백제기를 인용해 짜깁기해 만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병도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단지 120년을 더해 369년으로 기년을 바꾼 다음 전쟁 주체를 신공왕후에서 근초고왕으로 바꿔 광주-전남의 정복 역사를 식민지사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천년사는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전북 익산은 나주 반남에 근거를 둔 마한 진왕의 신하들로 사씨(沙氏) 세력들이다. 사씨 세력은 열도에서도 목씨(木氏) 세력, 즉 소야씨(蘇我氏)와 견줄 수 없이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역사를 정반대로 전도시키려면 온갖 비매너와 수치스러운, 야만성을 불러내야 하는 법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야만적인 주장이 통용될 것이라고 보는가. 이제라도 전라도천년사는 즉각 폐기하고 광주-전남의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호남사를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

## 社說

### 5·18재단 ‘시민 참여 공론화’ 환영한다

#### 시민참여 통해 비전 제시해야

5·18기념재단이 31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용서, 주체의 정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제안했다. 5·18의 주체를 두고 수개월째 거듭된 시민 단체와 5월 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5·18 해결 5대 원칙’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한다. 5·18정신의 미래지향적 개념과 계승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43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시작부터 흔들렸다. 특히 5월 단체와 시민 단체가 보여준 갈등은 화합과 대동정신이라는 5월 정신을 훼손시키기에 충분했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 기간인 지난달 16일과 23일, 28일 예정됐던 특전사 동지회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도 세 번째 취소되는 등 단기간 불화의 골도 깊어졌다. 5·18 기념식을 앞두고 더 이상의 파국을 막겠다며 기념재단이 마련한 5·18 단체와 시민 단체의 만남에서도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

았다. ‘해묵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끝내야 된다’고 했던 국민통합 선언도 그야말로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차원에서 진행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방향을 모색할 국민적 총의도 필요하다. 가해 책임자의 사죄와 용서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5·18유공자의 보존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 보완점을 찾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다. 1회성 행사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키지 못한 기념사업

을 미래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단이나 행정기관 주도의 공론화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 모두의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신이 만든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 광주시 근육장애인 조례 만들면 뭐 하나

#### 4년 동안 기본계획마저 없어

근육장애는 진행성 근육 위축이나 근력 약화로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성·진행성 중증질환을 말한다.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도 많다. 장애가 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내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근육장애 환자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광주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광주시는 근육장애인 실태조사를 두 차례 시행했다. 이게 끝이다.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됐다. 혹여 조례에서 5년 ‘뒤’ 수립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보니 5년 ‘마다’로 명시됐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5년마다 갱신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지난달 30일 광주복지연구원, 광주근육장애인협회 등이 모여 광주시의회에서 ‘근육장애인 복

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 4년만에 열린 첫 회의이다. 토론회를 들어보니 현 지원정책에 조소가 새어 나왔다.

광주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 근육장애인 상당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활동지원사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는 근육장애인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지원이다.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활동지원 시간을 더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분리해 독거가 돼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다. 애초 중증 근육장애인은 혼자서는 단 한시간도 있을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중심도 못 잡는다.

이런 발상은 과연 누가 한 것일까. 인류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체의 존속을 더욱 견고하게 해왔다. 광주시에 묻고 싶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면 조례 제정은 그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실험의 일환인가. 마치 약자를 조롱한 듯 해 뒷맛이 매우 쓰쓸하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30일(현지시각)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시위에 참여한 원주민 여성이 “기후 위기, 답은 우리”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원주민 토지 획정 정책을 변경하는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 브라질리아=AP/뉴스시

#### 서석대



깃발은 인류와 함께해 온 대표적 상징물이다. 국가나 집단의 역사, 지리, 국민, 가치관 등 모든 것의 상징이다. 깃발에는 인류의 꿈과 희망, 좌절과 분노, 충성, 환희, 광기의 오랜 역사가 응축돼 있다. 작은 천 조각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아래 모이면 거대한 힘이 되고 정신이 된다. 한 집단의 구심체가 되고, ‘그들’과 다른 ‘우리’가 된다. 깃발 아래 갈등과 분쟁, 평화와 혁명 등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관통했다.

다양한 상징의 깃발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국기다. 국기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이념, 정체성이 녹아 있다. 영국의 국기 ‘유니언 잭’은 왕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의 성 조지 십자가, 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레아 십자가, 아일랜드의 성 파트릭 십자가가 합쳐져 있다. 미국의 성조기는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주(州)의 수 만큼 별이 있다. 지난1960년 하와이주 승격으로 현재 별의 수는 50개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국기로 제정된 오성홍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별 다섯개로 그려졌다. 가장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고, 작은 별 네개는 노동자·농민·소자산계급·민족자산계급을 대표한다. 우리의 태극

기는 흰색 바탕 중앙에 파란색(음)과 빨간색(양)의 태극 문양을, 네 모서리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4괘인 건(하늘), 곤(땅), 감(물), 리(불)를 그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과 음양의 조화를 표현했다.

깃발은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강력한 상징이다. 1969년 인류의 첫 달 착륙 당시,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은 성조기를 달에 꽂아 전세계에 미국의 힘을 과시했다.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수상자는 자국의 국기 앞에 ‘맹세’하는 영광을 갖는다. 승리와 성취, 선점과 자신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깃발 아래 일어난다.

한국 주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육일기’를 달고 지난 29일 부산에 입항했다. 육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이다. 우리에게겐 전쟁 범죄와 학살의 ‘전범기’다. 일제는 육일기를 앞세우고 아시아 주변국을 침략하고,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 부산항에 제국주의 깃발이 휘날린다. 우리 땅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같아 섬뜩하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